

전자정부의 비전, 정책이슈와 추진과제

Implementing the Electronic Government: It's Vision, Policy Issues, and Programs

정 국 환 (Kuk-Hwan Jeong) 행정자치부 행정정보화계획관

목 차

- | | |
|-------------------|---------------|
| I. 서 론: 전자정부 개념 | IV. 전자정부 정책이슈 |
| II. 전자정부 추진배경과 비전 | V. 전자정부 추진과제 |
| III. 전자정부 추진실적 평가 | VI. 결 론 |

Keywords: 전자정부, 정보공동이용, 전자문서처리, 정부포털사이트, life-event 민원서비스

I. 서 론: 전자정부 개념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은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갖춘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부터 시작한다. 전자정부의 개념은 정보기술을 응용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는 것과 일치한다. 즉 경쟁력 있는 정부를 의미하는 것이다.

전자정부는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정보의 DB화·네트워크화 같은 정보기술의 활용과 업무 절차의 간소화·정부 조직간의 협조 강화 등과 같은 행정혁신이 바로 그것이다. 정보기술과 행정혁신을 융합하여 행정내부의 효율성과 대 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열린 행정·투명한 행정을 지향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다.

2001년 IMD 보고서(한국경제연구원, 2001)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세계 28위로서 전년에 비해 개선되지 않았으며, 세부 평가요소 중 정부 효율성은 개선되고 있으나(33위→31위)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디지털화를 통한 일하는 방법의 쇄신이 절실하다는 것이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배경이다.

전자정부의 개념은 강조하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여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정부통신기술(IT)을 활용하여 정부업무 처리방식을 혁신하고,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면서 국민에게 신속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정부 내부의 의사결정과정과 정부와 국민 사이의 상호작용을 전자화하여 컴퓨터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구현된 정부를 의미한다.

물론, 광의로 보면 입법부·사법부를 포함한 국가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오늘날 대부분 국가에서 협의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법」은 행정부를 중심으로 규율하되, 입법·사법 등도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체 국가기관이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보조를 같이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II. 전자정부 추진배경과 비전

2.1 추진배경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은 1980년대 말의 행정전 산망 사업부터 시작되었다. 정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컴퓨터기술을 행정업무에 적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국가 전반적으로 정보화 수준이 낮았던 그 당시에 정부가 먼저 시범을 보인 후 민간의 이용을 촉진 시키겠다는 것도 전자정부를 추진한 배경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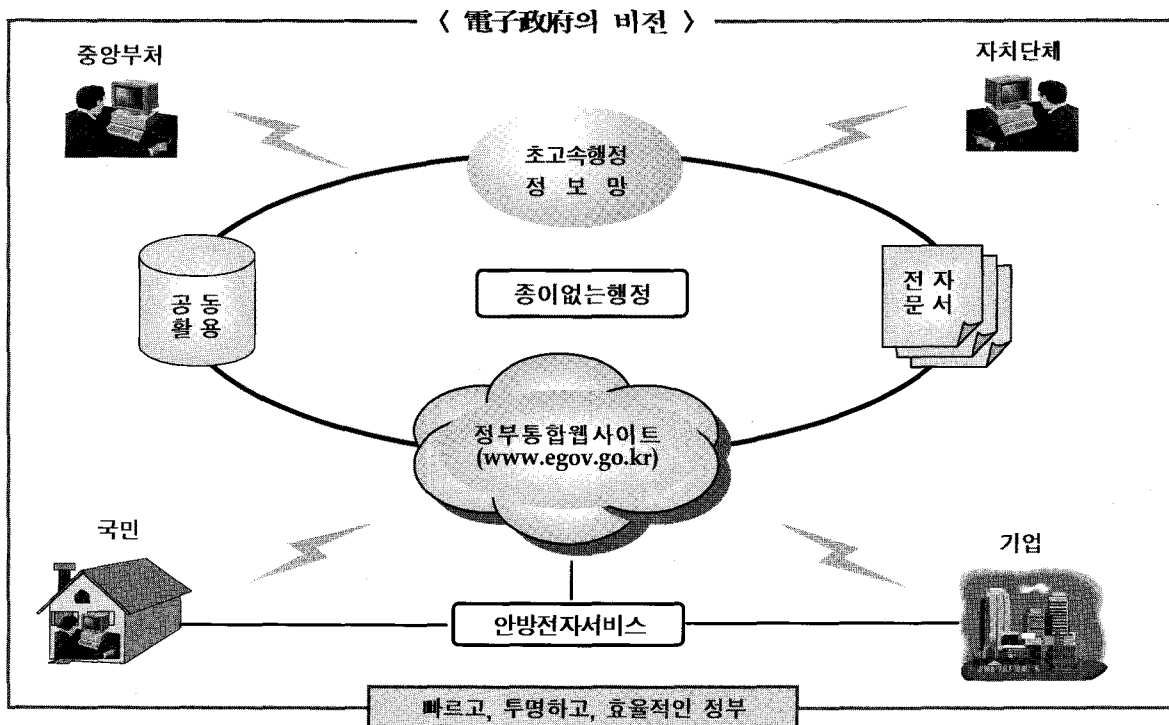
무한경쟁으로 특징지워지는 세계화 시대에 정보인프라 구축에 실패하면 선진국과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일종의 불안감이 그 당시에 팽배했다. 1세기 전 산업혁명의 대열에 끼지 못하여 후진국 신세를 면치 못했던 경험을 정보화 혁명에서는 되풀이

하지 말자는 각오도 깔려 있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목표로 전자정부를 추진하였는데, Information Superhighway,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NII) 등의 새로운 개념이 이 때 등장했다. 이들 개념과 선진국들의 모델을 도입하여 우리나라도 이때부터 전자정부 사업을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선진국의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뒤따라가는 catch-up 전략을 기본으로 미국 싱가포르 같이 앞서 가는 나라들을 따라 잡기 위한 노력이었다.

2.2 비전

전자정부의 비전은 단순히 더 많은 광케이블을 구축하여 행정기관을 연결하고 사무실에 더 많은 PC를



전자정부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PC와 초고속행정정보망을 이용하여 행정 및 민원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문서를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종이 없는 행정”으로 전환하고,
- 국민과 기업이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정부통합웹사이트에 들어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정보를 획득하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안방전자서비스’가 구현된 빠르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

〈그림 1〉 전자정부의 개념과 비전

보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정보기술을 정부혁신과 접목시켜,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고 고객 위주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21세기 지식정보입국을 구현하는 것이 전자정부가 그리는 궁극적인 비전이다.

행정업무 처리절차 재설계, 문서위주의 업무 감축, 정부기관간 정보공동이용 확대 등을 통해 행정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정보화를 통해 국민을 고객으로 하는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다. 어떤 관청을 방문하더라도 한 곳에서 민원을 처리(One-Stop Service)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국민이 안방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각종 행정정보 및 업무처리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와 용이한 상호작용을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것도 전자정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중요한 목표이다. 앞의 <그림 1>은 이와 같은 전자정부의 개념과 비전을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다(행정자치부, 2001).

Ⅲ. 전자정부 추진실적 평가

정보화 평가결과에 의하면(정보화평가위원회, 2001) PC 보급, 인터넷 이용환경 등의 기본적인 전자정부 기반은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 및 운용측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행정 부문은 업무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진척되고 있으나, 업무 재설계(BPR) 노력 등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 제공 수준, 국민의견 수렴 노력과 이를 위한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 등 전자적 민의수렴 부문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거나 민원사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전자민원처리 부문은 아직 초기 수준에 머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사업의 효과가 미진하고 특히 일반 국민에게 실제로 느껴지는 정보화 효과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지금까지의 정보화가 대민 서비스 개선보다 행정 내부의 능률향상 위주로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사무직 공무원에 대한 1인 1PC 보급 목표가 완료되었고, 전자우편 ID도 100% 보급되는 등 디지털 행정을 위한 기반 준비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정보화를 추진하면서 행정기관 특히 대민 접촉이 많은 일선 행정기관의 일하는 방법이 변하지 않아 국민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없었던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행정혁신의 필수적 수단으로서 전자정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정보화를 통해 일하는 방법을 과감히 바꿈으로써 공공혁신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민 접촉이 많은 일선 행정기관의 일하는 방식이 변하지 않아 일반국민의 정부개혁에 대한 체감효과가 낮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민 서비스 개선보다 행정생산성 위주의 정보화가 추진됨으로써 문서의 생성·유통 절차만이 정보화되고, 문서정보의 공동이용·관리는 기존관행이 유지되어 민원인이 정보화의 효과를 직접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정보와 서식은 제공되나, 민원접수와 교부, 처리상황 안내 등 쌍방향 서비스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제공되고 있음도 지적될 수 있다.

Ⅳ. 전자정부 정책이슈

그러나 이제 환경이 변하고 있다. 그 동안의 정보화 투자에 의해 PC 및 전자우편 보급, 전자결재/전자 문서 유통 등 전자정부 기반이 갖추어진 것이다. 또한 인터넷 이용인구수와 가정의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률이 세계 최고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다.

2001년 12월 말 현재, 인터넷 이용 인구수는 전체 국민의 52%에 이르는 2500만에 도달했고, 초고속 인터넷망 접속 가구수는 780만 가구를 넘어 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정보통신부, 2002).

더 중요한 것은 행정혁신의 필수적 수단으로서 전자정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 부문 혁신을 성공시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보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대통령을 포함한 국가의 많은 지도자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모든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전자정부 사업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경우, 2000년 이후 매년 전자정부를 가장 중요한 업무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중이며 각 실·국이 업무계획을 세울 때 전자정부 구현을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정보화에 관해서 지금 정도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다. 정보화평가위원회의 중앙부처 정보화 수준평가 결과(2001)에 의하면, 정보화비전·전략, 전자적 민의수렴, 전자민원, 전자행정 등 네 가지 평가항목 중 비전과 전략 항목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부처가 정보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보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목표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그 중요성을 인식한 기관장의 의지가 정보화를 성공시키는 관건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앞으로 전자정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일반국민이 그 효과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전자정부 사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인 인터넷이용 열기를 활용하여,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전자정부 정책을 민간부문의 효율성과 활력을 정부부문에 주입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지지하는 전자정부를 위해 파급효과가 큰 과제, 적은 예산으로 국민의 체감효과가 큰 과제부터 먼저 실천하여 전자정부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기관간 정보공동활용을 통해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첨부서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두 번째 정책방향은 기존 정책·조직·제도 등과 연계된 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기존의 정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관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며 공공부문 혁신과 함께 하는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동시에 새로운 정보화 정책과제 보다는 발표 후 시행이 부진한 과제를 재평가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중점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정책방향은 이해관계 그룹 사이의 의견 조정에 관한 것이다.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아마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지난 1980년대 말 이후 추진된 초기의 우리나라 정보화 정책은 그 이전 중앙 집중식 경제개발 정책의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Jeong & King, 1997).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되어 몇 차례에 걸쳐 추진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본 따서 국가정보화 중장기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해 관계기관 사이의 의견대립이 있을 때, 경제개발 계획 추진시에는 강력한 리더십에 의한 중앙 집중식 조정이 가능했지만 정보화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하나의 정보화 정책에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수가 과거 경제정책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많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전자정부 사업들은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과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예산, 조세, 교육, 복지, 민원서비스, 보안 등 다양한 이슈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정책 담당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정책은 강하게 밀어부칠 수도 있고, 그들이 동의하지 않은 정책은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자정부 정책은 중앙 집중식 의견 조정이 아닌 명확하게 정의된 실행계획 하에서만 효과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정부 계획은 무엇을(what), 왜(why) 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설명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전자정부 비전이나, 사업의 목표 속에 잘 정의되어 있다. 반면, 어떻게(how), 언제(when), 누가(by whom)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기관 사이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적지 않다.

많은 정부 부처들이 이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조정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인센티브나 리스크의 종류와 크기는 매우 다양하다. 어느 하나의 조정안이 모든 부처들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우리 정부는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차기근 조여킨다 이으며 처이래이 관련 부처의 강력한 지원으로 다양한 이해관계 대립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배경 하에 추진되고 있는 전자정부 사업 중에서 여기에서 논의된 정책 이슈와 밀접하게 관계된 대표적인 사업들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자정부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V. 전자정부 추진과제

정보화가 일선 행정기관의 일하는 방법을 바꾸고, 이를 통해 대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정부의 전자정부 정책이다.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가 이제 준비되고 있고, 그 일부는 이미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전자정부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민원 서비스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첨부서류 감축과 민원인의 관청방문 횟수 줄이기 가 바로 그것이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정보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 중에서 「시·군·구 종합행정 정보화 사업」과 「정보화를 통한 민원업무 혁신 사업(G4C)」, 「정보화 시범마을 사업」을 자세히 살펴보자.

5.1 시·군·구 종합행정정보화 사업

그동안 정부의 정보화사업은 중앙 및 시·도 위주로 추진됨에 따라 민원인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민 행정을 펴고 있는 시·군·구의 정보화 기반은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 또한 대부분 수작업으로 처리되고 있었고, 주민들도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정보화가 재정형편이 좋은 대도시 위주로만 발전하게 되어 농어촌 지역 등과의 정보화 격차가 날로 심해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행정의 생산성을 민간 수준 이상으로 높이고 정보화를 통한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97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총 1,570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지방행정정보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1단계로 행정 및 민원의 비중이 높은 주민, 지적 등 10개 업무를 우선 개발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도로교통, 민방위 등 나머지 11개 업무가 금년 10월 완성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

1단계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이 개발됨에 따라 주민·지적·차량·복지 등 10개 업무가 모두 전산화되어 상호 연계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고, 2억여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전 읍·면·동까지 LAN을 구축하여 모든 행정정보가 전자적으로 유통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시스템을 사용하는 담당 공무원 3만 여명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지방공무원들의 정보화 마인드도 크게 향상된 것이 또 다른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하고 신속한 대민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에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창구에서만 발급 받던 제증명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원접수부터 처리결과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도 제고되었다.

그리고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자료조사가 그동안 우편 및 전화로 이뤄짐에 따라 대상자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생산적복지정보공동시스템과 연계하여 전국의 자료를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되어 행정 및 주민불편도 많이 해소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민원의 대부분은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대민서비스 개선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종이 문서를 없애고 전자인증, 전자서명 등의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정부의 모든 민원과 정보를 One-Stop으로 처리하는 전자정부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인터넷 사용자가 2천 5백만 명에 달하고 있어 모든 행정기관의 업무와 민원도 인터넷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02년까지 추진하는 2단계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을 통해 “전자인증을 이용한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One-Stop으로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합과 동시에 다음에서 설명되는 민원업무 혁신 사업과 연계하여 인터넷 민원 서비스를 더욱 확장하고자 한다. 또한 행정 내부적으로는 모든 문서의 전자유통과 전자결재 및 정보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시·군·구의 완벽한 전자정부를 구현한다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5.2 정보화를 통한 민원업무혁신 사업(G4C)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과 함께 국민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정보화를 통한 민원업무혁신사업(G4C, Government for Citizens)이다.

주민·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 등 5대 국가 기본 DB를 공동 이용함으로써, 민원첨부서류를 대폭 감축하고, 민원인의 관청방문횟수를 최소화함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의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5대 DB 관련 민원업무의 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자정부 단일창구(정부 포탈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민원을 일괄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이 각종 민원을 쉽게 안내 받을 수 있도록 국민 또는 기업의 일상사(life-event)에 따른 민원 안내 지도를 제공한다. 2002년 2월부터 이미 일부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10월까지 단계적으로 마무리 할 계획이다.

편리한 대민 서비스의 관점에서 보면, 주민의 life-event에 따른 민원서비스 제공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일상사에 따라 설계된 전자정부 민원창구는 초기의 정부기관 홈페이지로부터 두 단계의 진화를 거친 것으로 해석된다. 첫째는 개별기관의 홈페이지를 묶어 단순정보와 링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탈 사이트로의 변화이고, 두 번째는 Reiner mann(2001)이 지적한 우리의 일상사의 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 창구로의 발전이다.

이 민원창구는 출생, 결혼, 은퇴, 사망, 건축허가, 회사설립 등과 같은 주민과 기업의 생애주기와 특정 이벤트에 따라 민원을 안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탈 사이트이다. 첫 단계의 포탈 사이트는 여러 가지 관계 있는 웹사이트를 묶어, 원하는 사이트를 쉽게 찾아가도록 연결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었다. 정부 포탈 사이트의 경우, 정부 조직도를 중심으로 원하는 부처에 용이하게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애주기에 따라 구성된 포탈 사이트는 고 객인 국민을 위주로 편리한 정부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이 창구에 들어가면 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신청양식을 얻고, 관련된 법과 제도 그리고 담당조직까지도 알 수 있으며, 민원신청과 처리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복잡한 정부 서비스를 간편하게 얻게 되는 것이다. 정부 홈페이지의 기능이 단순한 정보 제공에서 민원 서비스 전달 즉 정부기능 그 자체를 수행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민원 신청시 첨부서류의 감축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완납증명 등 수요가 많은 첨부서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우선 2002년 2월 1일부터 「주민등록확인시스템」 운영을 시작하였다. 그 동안 국민들이 정부에 행정서비스를 신청할 때 첨부하던 주민등록등본을 획기적으로 감축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스템은 국민이 따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 첨부하게 하지 않고, 그 대신 민원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열람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행정기관이 민원처리과정에서 국민에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게 하던 그 동안의 관행에서 행정내부의 DB를 이용 자체 처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 시스템 운영에 따른 행정기관 제출용 주민등록등본 감축건수는 연간 약 900만 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르는 효과는 종이절약, 행정효율성 증진, 국민의 관청방문을 위한 시간 및 경비 절감 등 그 효과가 지대할 것이다.

5.3 정보화 시범마을 사업

저소득층, 농어민 등 정보소외지역에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정보접근 기회를 높이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콘텐츠를 구축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정보생활화를 일상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러 가지 전자정부 사업의 결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주민들에 의해 활발하게 이용되고, 이를 통해 전자정부 사업의 추진력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인터넷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화마을을 시범 조성하여 농어촌 정보화의 표준모델로 육성하고, 이 모델을 시범지역 특성별 정보화 수요에 따라 차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정보화교육장과 인터넷 플라자 등을 적극 활용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정보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지역 특산물 판매를 위한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농산물 재배현황 정보, 작황정보, 가격정보 등을 실시간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 본 사업의 또 다른 목표이다.

2001년 5월 전국에서 19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별 초고속인터넷망을 연결하고, 마을 정보센터를 구축하였으며, 가구별로 PC 보급을 완료하였다. 마을에 필요한 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콘텐츠뱅크, 전자상거래시스템, 이용자 수준에 맞는 홈페이지 등의 구축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는 마을 수를 100개 정도로 확대하여 추진함과 동시에 사업의 결과를 평가하여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정보 생활화 운동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도 준비 중이다.

VI. 결 론

일반 가정에 초고속 인터넷망의 연결과 이용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등 불과 4, 5년 전 만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온라인 환경이 인터넷 기술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도 인터넷 기술을 응용한 업무처리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시군구 행정시스템 등 각종 업무처리 절차의 정보화와 인터넷을 통한 민원업무 처리, 그리고 소외지역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전자정부 서비스의 이용기반을 더욱 넓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보화 시범마을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는 앞의 <그림 1>이 보여 주듯이 문서처리과정을 전자화하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정부기관들이 공동 이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이 원하는 정부

서비스가 전자적으로 제공되어 그들이 편리함을 피부로 느끼는 전자정부가 확립되어 간다.

우리나라가 전자정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물리적, 제도적 기반은 이제 어느 정도 갖추어 졌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남은 것은 우리의 비전과 목표를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앞서 논의한 전자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정책과제를 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인터넷과 전자정부 과제가 최대한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잘 가다듬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정보화평가위원회, "2001년도 국가정보화 평가결과,"

2001. 9.

정보통신부, 인터넷 통계자료,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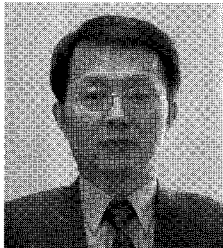
한국경제연구원, IMD 국가경쟁력 관련 보도자료, 2001. 4.

행정자치부, 2001년 청와대 업무보고 자료, 2001.

Jeong, K. & King, John, "Korea's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Vision and Issues," in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Initiatives* ed. by Kahin, B. & Wilson, E. The MIT Press, 1997.

Reinermann, H. "Electronic Governance and Electronic Government: Do Politicians and the Internet need each other?," Discussion Paper, CRITO,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2001.

○ 저 자 소 개 ○



정 국 환 (khjeong1@mogaha.go.kr)

서울대학교와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각각 경제학사와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행정자치부의 정보화계획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보기술과 경제사회변화, 전자정부, 인터넷과 신경제, 정보기술 응용효과측정 등이다.